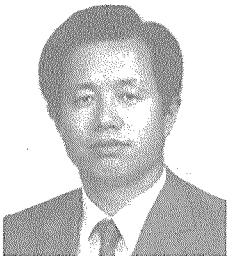


전자정보산업 앞으로 3년이 중요하다.

— 필수적인 기술개발로
국제경쟁력 다져야 —



남 중 우
상공부 전자정책과장

세계전자산업은 2 차대전시까지 미국·서구를 중심으로 시작, 발달되어 오다가 일본이 1950년대부터 미국의 가전제품보다 가격 및 품질면에서 우위를 확보하면서 수출을 증대시켜 세계 제 1의 가정용 전자생산국이 되었으며, 컴퓨터, 반도체, VTR 등 산업용 전자제품을 생산 개발하면서 세계 제 2위의 전자산업국으로 부상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산업수출은 '80년도에 21억\$, '86년 74억\$, '88년 157억\$로서 지난 8년간 연평균 30%씩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면서 전자산업이 '90년대의 수출주도 산업으로 발전하게 될 기반을 굳히게 되었다.

이는 모든 전자공업인, 근로자들이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흘린 땀의 결정이라고 생각하며,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더 나은 결실로 연결되어 명실공히 세계적인 전자공업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간은 보다 많은 노력과 땀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우리 전자업계는 기술개발에 다소 소홀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 노사마찰이 지난 3년 연속('87~'89) 지속되어온 결과 전자수출이 '89년에는 165억\$로서 전년대비 신장률이 5.1%로 대폭 둔화되었으며, 특히 '89년 4/4분기부터는 수출이 감소세로 반전되었다.

우리나라 총수출의 26.6%에 달하는 제 1위의 수출품목인 전자산업의 수출부진은 앞으로 한국경제의 중대한 적신호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수출은 그 금액자체보다는 우리 상품이 어느정도나 외국시장에서 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국내시장을 외국제품으로부터 어느 정도 방어해 낼 수 있느냐 하는 중요한 산업경쟁력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출부진은 곧바로 국내시장에 있어서 일본 등 외국가전제품의 무차별 침투에 우리

가전제품이 고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미군 PX, 여행자 휴대반입, 밀수 등에 의한 불법유입과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를 통한 일본의 우회수출에 어쩔수 없이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시장, 특히 세계 각국의 경쟁력 각축 및 시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시장에서 패배하거나 그동안 세계시장에서 겨우 일본과 경쟁해 왔던 유일한 요인이었던 가격경쟁력마저 역전된 기막힌 현실에 닥쳤으면 이제 우리는 이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외국선진국이 과연 무엇이 그렇게 한국이 예쁘다고 재도약하도록 고급 첨단기술을 이전해 주겠는가? 그들은 이제 한국에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오히려 더 이상 기술이전이 계속되면 세계시장에서 호랑이를 키운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옛날의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으로 떠나가고 있는 것이며, 그곳에서 또다시 한국을 이용했듯이 핵심부품을 공급해 주고 조립산업을 키워가며 급기야는 한국을 코너에 몰아 넣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은 제조업을 하는데 소질이 없는가 하고 의심해 보고,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제조업을 부업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디에서 연유된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물가가 수직 상승하고 증권시장이 침체되는 어려운 경제난국이 닥친다고 해도 제조업 특히 전자, 자동차 산업 등이 끈질기게 성장해 나간다면 무엇이 걱정이 되겠는가?

이제 우리는 결허하게 반성하고 제조업에 대해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감히 주장하고 싶다. 안된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코페르니쿠스적 사고의 대전환을 하겠다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을 만들어서 발표하더라도 결국 전자, 자동차와 같은 주도산업(Leading Industry)의 제품이 외국에서, 특히 미국시장에서 패배해서 돌아올 때 누가 한국경제를 이끌고 갈 것이며 '90년대에 이 많은 국민

들을 먹여살릴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 전자산업을 결정적으로 억누르고 있는 몇가지 멍에에 대한 해소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수도권 대학교 전자공학 관련 학과의 정원을 3 배이상 증원해야 한다

전자공장의 생산라인에서 흔히 볼수 있는 PCB 원판의 핵심부품 위에 Made in Japan이라는 글씨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를 개발하는 기술연구소에서 일본제품과 경쟁하기 위해서 핵심부품을 개발해야 할 고급연구개발 인력이 1/3밖에 확보할 수 없다는 산업현장의 하소연(?)을 왜 우리는 지금까지 외면해 왔는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서 대학정원을 단 한명도 증원할 수 없다는 논리는 인문계열 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특히 R&D가 중요하다고 아우성치는 이 판국에 전자공학과 정원을 몇백명 늘리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될 것인가? 관계법령을 개정해서라도 고급기술계통의 정원을 과감히 늘리는 결단을 내려야 이 경제난국을 돌파할 수 있지, 지금까지 늘상 해왔던 식으로 법령의 탓으로 돌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상공부 내에 기술개발자금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제조업 육성의 책임을 지고 있는 상공부에 유일한 기술개발자금인 공업기반기술 개발자금이 '90년에 290억원에 불과하다면이는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다. 2,900억원 이라면 혹시 이해가 갈지 모른다.

전년대비 몇% 증가율에 얽매어서 예산증가율이 계속 소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일본 전자제품이 계속 첨단화 되어가면서 뛰다 못해 날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할려는지 정말 답답하다. 전자제품의 Life-Cycle이 몇 개월로 단축되고 있는데 늦으면 그만큼 손해이고 회복시키는 데 시간과 정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현재 타성에 젖어있는 기업의 기술개발 Mind

를 근본적으로 제고시키는 방법은 상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업기반기술 개발자금(출연금)을 너무했다고 할 정도로 즉, 10배 정도 증액시키는 결단이 내려져야만 이 경제난국을 돌파할 수 있다고 감히 강조하고 싶다.

세째, 상공부 산하에 전자정보부품 기술연구소가 금년이라도 착공되어야 한다.

왜 제조업이 안되느냐? 노동집약 산업에서 짠 노임이 통하던 몇 년전 까지만 해도 상공부의 산업정책은 단순한 인허가 수단과 수출독려라는 물리적인 수단에 의해서 또한 선진국으로부터 기술도입에 의한 복사기술로 수출신장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옛날식 수단은 이제 통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수출의 최첨병인 상공부는 스스로 새로운 수단(Tools)을 개발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앞에서 언급한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이고 또 하나가 산하 국책 또는 민간생산기술연구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상공부 정책당국자들이 주기적으로 기업에 있는 분들 뿐만아니라 산하 기술연구소장 및 연구소의 연구실장들과 머리를 맞대고 HDTV, 반도체, G4 FAX, 컴퓨터 개발 등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에서 핵심부품기술이 독자적으로 개발된다는 아주 극히 상식적인 패턴이 우리에게는 아직도 통하지 않고 있다.

상공부내에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기업을 강력히 행정지도할 수 있는 수단이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는한 앞으로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회복시켜 외국선진국을 추격하고 떠오르는 후발개도국인 태국, 인도네시아 등을 따돌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네째,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

도대체 전기세탁기, TV 등과 같은 생활필수품이 사치품이라고 특소세를 15~25% 부과하여 내수신장에 쉼기를 박고있는 현실을 개탄한다. 내수의 뒷받침 없는 수출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에 속하는 경제원리인데도, 우리는 수출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내수에서 착실히 벌어들인 돈으로 기술개발을 해야만 외국시장에 나가 질주하고 있는 일본제품 등과 경쟁할 수 있는 것이다.

국내시장에서 일본가전제품이 특소세를 물지도 않고 불법유통되어 범람한다고 탓만 할것이 아니라 국내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를 없애므로서 외국제품보다 국산의 가격이 비싼 우습광스러운 현상이 서울 한복판에서 더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용산전자시장에 가보면, 일본 “아끼아바라”가 그대로 서울로 옮겨온 듯한 현실을 우리는 직시하고 특소세 철폐라는 실효성있는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앞으로 3년('90~'92)은 우리가 결코 놓칠수 없는 시기다.

초 스피드로 진전되고 있는 전자산업 기술의 개발속도를 어느 정도 만회하기 위해서 기업은 물론 정부, 연구소, 근로자 모두가 금년부터 적어도 3년간은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위에서 제안한 대처방안들이 국민의 공감대 위에 관련부처가 협조하여 과감히 실현될 때 전자산업의 재도약이 기약되는 것이고 진정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이다. 내년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금년부터 오직 실천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이제 우리를 포함한 후대들이 독자기술이 없어서 일본 등 선진전자산업국에 끌려 다니도록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